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성과 중심’의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간부급 직원에서 민생 최전선 실무자까지 ‘현장 중심’ 행정에 역량 집중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30일(월) 11시 5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민생현장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엔데믹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견조한 고용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청년인구 감소,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수요 등 우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발빠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니트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과 구인난 기업의 구인-구직 매칭 등을 강화하고, 사실상 내국인 취업이 어려운 빈일자리에 제 때, 적극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수의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동참하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안전·상생·혁신의 노동개혁을 토대로, 직장 문화 대변혁을 위해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백석현 (044-202-7027) 김은화 (044-202-7028)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올해 우리 노동시장의 견조한 고용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고용호조성장(Job-rich recovery)”으로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대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 및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 특히, 노동시장 진입연령대(25~34세)인 청년들의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 ▲연령별 고용률('23.3Q): (15-19세) 7.7 (20-24세) 46.5 (25-29) 72.4 (30-34세) 80.4
 - ▲청년 체감실업률: ('19) 22.9 ('20) 25.1 ('21) 23.1 ('22) 19.0 ('23.1~9) 17.0
 - 여성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 ▲여성 고용률(%): ('19) 51.6 ('20) 50.7 ('21) 51.2 ('22) 52.9 ('23.1~9) 54.0
 - ▲30대 여성 고용률(%): ('19) 62.0 ('20) 61.3 ('21) 61.3 ('22) 64.4 ('23.1~9) 67.5

다만,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 ▲빈일자리: 9월 22.1만명, 8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 이전('19년 17.8만명) 보다 높은 상황
- ▲청년 “쉬었음”(9월, 만명): ('19) 36.9 ('20) 45.6 ('21) 40.6 ('22) 38.8 ('23) 37.3
- 따라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고용서비스가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효율화하면서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확대한 이유입니다.

* (청년<니트예방, 매칭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23) 408억 → ('24안) 706억,
청년빈일자리취업지원금(483억, 신설)

(여성<모성보호 및 맞돌봄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 ('23) 2.1조 → ('24안) 2.5조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고용 예산: ('23) 8,478억 → ('24안) 9,009억

□ 구인난 해소를 위해 그간 세차례 발표한 대책*을 통해
실제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 맞춤형 대책 등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 ▶ 1차(3.8): 빈일자리 많은 6대 업종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지원
- ▶ 2차(7.12):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신규 선정,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 ▶ 3차(10.16):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 지역 고용센터에서 기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실상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현장에서 E-9 외국인력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쿼터·업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E-9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2만명까지 늘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 업종별 인력수급 전망 등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 허용 업·직종 및 내년 도입 규모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체류지원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노동개혁의 첫 걸음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 초부터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운영과 회계의 자율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 이번 달 1일에는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국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까지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 노·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령자 계속고용 등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대화에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결과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등 불법·부조리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약 1년(취업 첫해 5.10 ~ 익년 9.30)간 근로손실일수(단위: 일):
盧 약 220만, 李 약 113만, 朴 약 103만, 文 약 122만, 尹 약 48만

*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단위: 일):

(’15) 30 (’16) 30 (’17) 29 (’18) 22 (’19) 21 (’20) 23 (’22) 15 (’23) 8

-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법치의 개혁을 실제 국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제도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개편 방향과 상생임금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토대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고 노·사, 원·하청, 취약계층이 함께하는 ‘안전’과 ‘상생’의 일터, 능력과 기회가 넘치고 생산성 있는 ‘혁신’의 일터가 되도록 노사법치를 K-직장문화 대변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첫째,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현장 활동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이미 우리는 한발짝 더 움직이면 손에 잡히는 현장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여름 폭염 대응을 위해 400여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온열질환으로 일터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폭 줄었고,
- 명절 기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 전 직원 역량을 결집하여
체불을 전에 비해 2배 이상 청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 운영 →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 청산
(지난해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

- 본부 실·국장, 지방관서장에서부터 민생 최접점의 실무자들까지
사무실 책상을 떠나 현장에 나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둘째, 일터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늘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걸음 앞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조치해나갑시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점들을 돌아보고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집행과정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현장과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살펴 미리미리 개선해야 합니다.
- 현장에는 언론보도나 퇴사 후 드러나는 임금체불 외에도
일하고 있는 중에도 임금이 몇 달씩 지연 지급되는
잠재적 임금체불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시장에는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새벽이나 야간에 상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모성보호제도를 실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 등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정부는 그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최초로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감춰진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아인슈타인의 지적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다른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셋째,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고 정책의 외연을 넓혀 나갑시다.**

-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정형화된 틀에 얽매인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동안 유지해 온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만을 넘어 미조직 근로자 등 직접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의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제대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정부위원회의 제대로 된 대표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호를 넓힌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도 전통적인 ‘사업장’이라는 틀 내에 한정된 감독과 규율만으로는 새로운 위법, 위험요인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 변화하는 근무시간과 장소, 디지털 기술의 급변에 맞추어 우리가 법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환적 변화의 시기, 노동정책과 행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올해 겨울은 한파와 이상 고온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기습한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1월 중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확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점검 강화 등 한파 대응에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이제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간 국민께 중단없는 개혁과 성과 체감을 약속드린 만큼,
- 냉철한 자기 평가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